

공정위, 잘못된 정보 제공 유민에쓰티 제재

광고에 '원천특허' 시정명령 부과

법률적인 정의가 없어 광고에서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원천특허' 표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민에쓰티가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민에쓰티는 2008년12월~2021년6월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필름형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유민에쓰티가 원천특허라고 주장하는 특허는 기존에 개발돼 있던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조 기술에 부가적으로 은 화합물을 이용한 인쇄기법을 적용해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특허 내용은 원천특허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선행 특허발명이 아니어서 경쟁사들도 유민에쓰티의 특허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제조·판매하

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민에쓰티 측은 '원천특허'라는 용어는 법률적·기술적으로 정의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광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누액감지기 분야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허 등 기술력이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적발·조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원천특허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법률상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산업부 장관, 삼성SDI 울산사업장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이차전지 생산 기업인 울산 울주군 삼성SDI 울산사업장을 방문해 전영현 삼성SDI 사장의 안내로 이차전지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전작권 전환 추진, 핵심 국정 과제”

서욱 장관,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국방부가 5일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올해 첫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실시했다.

서욱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이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책임 국방'을 달성하는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작권 전환 과업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21-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하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이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군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및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성과를 점검 및 평가했다.

또,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군 차원의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서장관은 새로 부임한 연합사령관 등 주한미군 주요 직위자들과 국방 및 군사 당국 간 다양한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데에 노력을 경주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일 취임을 하루 앞둔 폴리카메라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한반도 정세를 잘 아는 분이 부임해 기대가 크다"며 "전작권 전환, 용산기지 반환 등 현안과 관련해 한국군과 긴밀히 소통해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리카메라 사령관은 '18줄 해외복무 소매장'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지난 1일 그가 착용한 예복(ASU)에는 해외파병 6개월당 1줄씩 부착되는 해외복무 소매장이 18줄이나 부착돼 있었다.

리카메라 사령관은 9년의 해외야전복무기간 중 한국에서의 야전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 소령 시절 주한 미2사단 예하 대대 작전장교로 근무하면서, 당시 최전방 비무장지대 작전을 수행한 바 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취업 저조' 정부 일자리사업 14개 사업 예산 10% 줄인다

고용부, 지난해 일자리사업 성과 145개 중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필요 36개, 감액 14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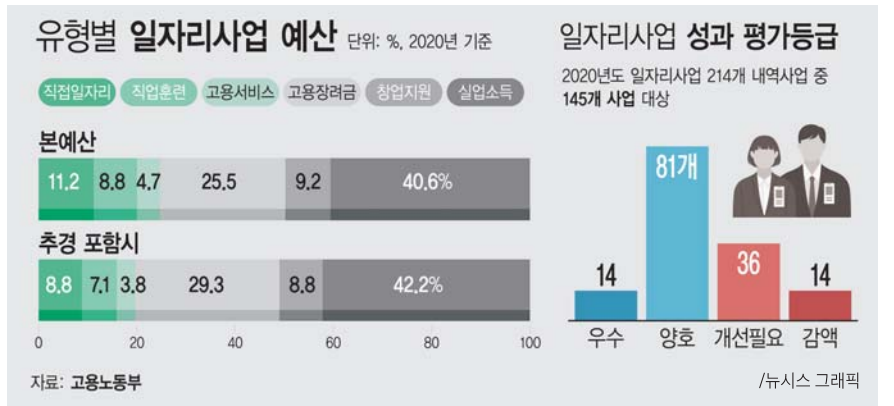
'새일 여성인턴' 취업률 95% 총 671만명 지원... 청년 39%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 '산림서비스도우미' 등 지난해 정부 일자리사업 중 14개 사업이 성과가 낮아 예산 10% 감액 대상으로 꼽혔다. 대부분이 일자리 사업 자체가 모호한 데다 사업이 끝나면 민간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정부 일자리 사업 성과 평가보고서를 5일 공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일자리 사업 214개 중 171개를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했다. 이 중 신규 사업 등을 제외한 145개 사업의 만족도 조사, 예산 집행률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우수' 14개, '양호' 81개, '개선 필요' 36개, '감액' 14개로 나타났다.

감액 등급을 받은 사업을 보면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고용부), '빅데이터 활용 청년 인턴십 운영' (행정안전부) 등의 경우 사업 목적, 대상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활동 내용을 새로 발



굴,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청), '박물관 운영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전문성이 떨어져 민간 취업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였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청), '환경지킴이' (환경부) 등은 업무 특성상 현지에 취업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모른 채 사업을 진행한 사례로 꼽혔다.

고용부는 감액 등급을 받은 14개 사업에 예산의 10%를 깎도록 권고했다.

반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취업률과 고용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 (새일 여성 인턴) 사업은 사업 참여자의 취업률이 94.8%, 취업 이후 6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한 고용 유지율도 79.0%였다.

한국폴리텍대학의 직업훈련 사업인

'기능인력 양성 및 장비 확충 하이테크 과정'도 취업률이 80.9%로 높았다. 참여자들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에 이

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직접 일자리 11.2%, 직업훈련 8.8%, 고용서비스 4.7%, 고용장려금 25.5%, 창업지원 9.2%, 실업소득 40.6% 등이었다.

이 사업으로 총 671만명이 지원받았고, 이 중 청년이 259만명(38.6%)으로 가장 많았다. 청년은 주로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전년 (25조5000억원) 보다 19.8% 늘어난 30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내년 일자리 예산에 반영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6년 수도권 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확대 예상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은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게 된다. 5년 후부터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해 6일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된 경우 소각시설의 규모와 설치기간 등을 고려해 환경부장관이 1년 여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이 80~90% 정도 감축하면 매립량은 10%에서 20%로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300만t 중 직매립 생활폐기물이 75만t으로 25%를 차지했다. 직매

립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75만t의 15%에 해당하는 양의 소각재만 발생한다.

이번 시행규칙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도 담겼다.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 제외)는 앞으로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정보처리기를 폐기물처리시설 내 설치하고, 그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홍동근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EU, 철강 셰이프가드 3년 연장

산업부, 재검토·연장철회 요구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셰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3년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재검토해 연장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5~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빈 웨이안드 통상총국장 및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다

자통상 현안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논의한다. CBAM은 탄소 배출 방지를 위해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은 7월 14일 CBAM 법안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3년의 과도기간을 거친 후 2026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일 실장은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 면담에서 EU 철강 셰이프가드가 7월 1일부터 3년 연장되며 철강 분야 보

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한-EU가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특정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세총국장과 면담에서는 유럽연합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WTO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